

투데이 칼럼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정책

북한이 어김없이 한미 연합 훈련을 문제 삼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했다.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방어적 성격으로 진행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50명이 참가하는 100명이 참가하는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닌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와 남북 대화 창구 해체 가능성도 꺼냈다.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 국제 관광국을 비롯한 교류 기구를 없애는 문제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최고 수뇌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번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업포성 경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의식한 듯 바이든 행정부에도 경고를 보냈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은 을 3월 8일부터 1, 2부로 진행해 전반기



정복구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연합지휘소 훈련(21-1 CCPT)을 3월 18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야외 기동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 한미는 훈련 기간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 병커인 B-1 문서고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병거(탱크) 등에 지휘소를 분산 운용했다.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양국 장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훈련 참가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 합사령부의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은 시행되지 않았다.

한미는 FOC 검증 연습을 일단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쪽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국 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을

인'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도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이라는 말을 연일 강조하며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한 뒤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도 대외보다는 대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들 내부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여정이 기습적으로 담화를 발표해 비난 수위를 높였을 뿐이다.

그동안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은 미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최대 전략 무기가 동원됐다. 그러나 3월마다 진행되던 한미 야외 기동 훈련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19년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동맹 연습으로 대체하고 실 기동 훈련은 폐지했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미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당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은 틈타 온 방식에 의존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남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전략적 무력시위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호응도 끌어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 오면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남북 정상급 공식 군사 회담은 2018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9.19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군사 공동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사설

민주평통 위상과 역할

민주평통일자문회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국내외 해외에 20여 명의 위원이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우선 민주평통의 한계는 전문성 문제다. 어느 분야든 전문 역할을 하겠다면, 전문할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문(諮詢)'이란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의견을 묻는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평통이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전체 평통 회의나 각 지역 모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자문자답(自問自答)해야 한다.

역대 정부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수정한 적이 있는가도 되물어봐야 한다. 평통위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일부를 빼고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분

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은 통일 전문 연구원이나 전문 언론인 등에게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포터스는 원래 어떤 정책이나 운동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모임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민주평통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서포터스 그룹'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평통위원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높여야 한다.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가지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중간 조정자 역할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관과 대북관 정립이 필수적이다.

남남갈등 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중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민주평통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의 뜻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기 바란다.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거는 기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총 32개의 마을미디어가 활동할 정도로 지역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자원이 확대되고 있다.

마을미디어라고 하면 음향이고 르지 못하거나 영상이 흔들리고 생각한다.

구성이 엉성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아마추어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스스로 미디어'로서 공동체미디어는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관심사가 그대로 전달될 때 더욱 의미를 갖는다.

2020년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만 봐도 그렇다.

독서 논쟁이나 그림책 단들기와 같은 개인적 관심사에서부터 동네의 길고양이를 기록하거나 관공 안배를 했다. 마을 앞 하천의 생태나 방치된 변전소 부지 활용 방안과 같은 공동체 의제를 발굴했다.

코로나19나 4.15총선, 기본소득 문제와 지역상권 문제를 다룰 때

는 마을 주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접근했다. 마을신문에서 출발해 라디오와 유튜브까지 복합 미디어 전략을 시도했다.

라디오 방송에 디지털 ZOOM 프로그램을 접목해 현장 중계 형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동네 지명에 얽힌 사연만을 찾아다니는 소위 '기자 브랜딩'을 선보인 영상 활동기도 있다.

2020년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은 평화동 마을신문 김강수 기자의 '지시계 준설도 공방에서부터 생태공원 정비 사업까지 연속 보도'가 수상했다.

평화동 마을신문 이평강 기자의 '도르령 탐정 시리즈'는 우수상을 받았다. 김수민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장은 공로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문(잡지), 라디오, 영상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95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공로상 후보까지 포함하면 100편이 훌쩍 넘었다. 갈수록 주민이 미디어가 되고 있다.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화물차 범규위반 대형사고로 이어져!

도내 교통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이상 발생하며, 자동차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년 대비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5.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분월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월 6.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은 3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화물차 유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결과 개방형 적재 화물차 운전자 중 15.3%가 적재물을 낙하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9.8%가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 1월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사

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초과나 적재불량, 발생주차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등이 관습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화물차량의 적재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이 미흡 미작동 등 정비불량 위반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적이나 정비불량, 불법 개조 등 대형사고야기 요인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평소에 꼼꼼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등 범규준수 생활화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전군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김광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시아계 혐오 범죄 관련 발언하는 찰스 윤 회장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사진)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 호텔에서 열린 전국행동 네트워크(NAN)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quote from the newspaper and a call to action for subscribers.